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도입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도 첫 도입

2차 환자경험 평가 실시 ... 평가대상 병원 확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확대한다.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대상으로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그동안에는 중소병원의 특성상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해 기준의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입원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처음 도입한다.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

예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술, 치매,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을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지표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시스템 '평가 Bank'(가칭)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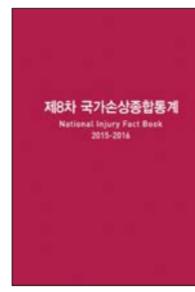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도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주제진 기자 hijoo@ koreanurse.or.kr

국가손상종합통계집 발간



질병관련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여러 기관과 협업해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참여기관은 농촌진흥청,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이다.

손상은 질병 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 즉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해로운 결과로 정의하며, 비감염성질환의 한 영역이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손상관련 자료를 통합·표준화해 자료 간 비교가 원활하도록 만든 우리나라 전체 손상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통계이다.

제8차 통계집은 손상의 발생부터 구급대 이용, 응급실/외래방문, 입원, 사망까지의 자료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손상과 특정 손상을 나눠 통계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손상의 규모와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손상 현황과 연관된 통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계 간 비교가 쉽도록 했으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자해/자살 손상 내용을 추가했다.

송경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교수는 "국가손상종합통계집을 통해 각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손상통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며 "근거기반의 손상 예방정책 시행을 지원함은 물론 미래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손상 분야 빅데이터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집은 지난 1월에 유관 공공기관, 병원, 대한응급의학회 등 90여개 기관에 배포됐다.

질병관련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제진 기자 hijoo@

노인증후군 위험인자 연구결과 발표

비만·흡연·음주가 노인증후군 위험도 높여

비만, 흡연, 음주가 노인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이고, 노인증후군은 요양시설 입소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노인학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육창, 섬망, 실금에 대한 위험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2006~2015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표적인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섬망, 실금, 육창을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961명을 대상으로 노인증후군의 위험인자를 추적·분석했다.

2015년 기준 노인증후군의 유병률은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육창 0.9%였다. 2006년에는 낙상 관련 골절 3.5%, 섬망 0.2%, 실금 0.9%, 육창 0.8%였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육창 3.6배 위험도가 더 높았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섬망과 실금 발생위험이 각각 1.4배 더 높았다.

비만, 흡연, 음주 습관은 노인증후군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실금 발생 위험이

주제진 기자 hijoo@

간협,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대한간호협회가 최도자 의원의원이 지난 2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법정단체화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시안이 아니다.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522-1755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 김미연 간호사 저



는 희망노래' 4부 꿈이 되는 이야기' 5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꿈이다' 6부 꿈이 내리는 길, 지금 그리고 여

기'로 구성됐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은 돈 잘 벌고 행복한 간호사의 동화 같은 이야기만은 다루지 않는다"면서 "가장 없이 적은 나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가능성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연 간호사는 수원여대를 졸업했다. 유튜브 방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도 일간 정보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꿈을 응원해 주고 있다.

(포털스/394쪽/1만8000원)

주제진 기자 hijoo@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허용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도자 의원이 2019. 2. 13.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 상황의 변화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간호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비롯한 안정적

인력수급 등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시안이 아니다.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 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

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침해하게 하락시키는 금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2. 22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